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우리의 대응전략(상)

문 영 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1. 머리말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4월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발전부문이 여러 개의 자회사로 나뉘어져 독립운영에 들어갔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일부는 해외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그 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닳을 올리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력역사상 초유의 대변혁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영국을 필두로 해서 구미 각국의 많은 전력회사들이 이를 도입하여 경영성과를 입증해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IMF 이후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지난 연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 본격적 실행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그 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도입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상당한 현실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구조개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에서 보듯이 시장경쟁체제를 전력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경쟁체제의 불확실성은 완벽한 대책을 세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결정적 실수는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우리의 대응전략과 마음가짐을 개괄적으로나마 제안함으로써 앞으로의 안정적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꼭 해야만 하는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전문가조차도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놓기가 힘든 어려운 질문이다. 선진국 전력회사들이 구조개편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여건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시장체제의 효율성 검증은 많은 시간과 충분한 수의 사례

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해 우리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더더욱 곤란한 것은 그러한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실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우리의 귀에 익은 구조조정은 수익성 제고가 목적이다.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흑자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유일의 전력 산업체인 한전에서는 꾸준한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왔고 작년 결산에서도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여 공기업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경영 실적을 올렸다.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독점체제하에서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들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방만한 조직을 갖고 있으며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만한 조직을 갖게 된 것은 내적인 경영 미숙이나 실책에 있다기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온 관치행정이 빚어온 누적된 결과로서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다.

비효율적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한 조직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빚어낸 결과로서 사회불안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훌륭히 해 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기업에서 적정 고용 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해고한다고 해보자.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 날 것이며 사회불안은 극에 달할 것이 아니겠는가.

기업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은 한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외국 기업은 기업수익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기업에서 창출한 전체 부가가치가 더 중요하다. 한전의 경영평가는 크게 보면 최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특성

상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고용중대를 통하여 국민 경제부양에 큰 역할을 해왔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실정상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가파른 수요성장 때문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인가?

문제는 빚이다. 한전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95억불의 외채를 지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가파른 수요성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했었고 투자비는 대부분 해외차관으로 충당하여 많은 외채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경영부실로 치부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처럼 세간의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이것은 결코 경영부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으면 약점을 잡히게 되어 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여 많은 흑자를 냈다고 할지라도 막대한 외채를 상환하는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이 기간에 부채 상환을 독촉한다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이 문제인 것이다. 수십 년을 보장하는 장기대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간의 계약으로 들여온 외채는 상환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상환기간을 연장받든가 아니면 다시 외채를 빌려다 갚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호황이고 대외신용도가 높으면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IMF를 맞아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 우리의 처지로는 이것이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또 다른 차관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

에 없게 되어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IMF 차관을 얻어오면서 발전소 해외 매각을 약속해 버렸다. IMF에서는 차입금을 빌려주면서 자구노력으로 빚 갚을 방안을 요구했고 소위 이행각서라는 것에 일부 우량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일련의 빚 청산계획서를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 속에 은행 매각도 들어있고 발전소 매각도 들어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발전소를 매각하겠다고 한 것이나 실상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빚만 갚을 수 있다면 발전소를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무엇을 팔지 않고는 짜여진 일정에 따라 빚을 갚을 수 없고 팔아야 할 상대도 그들이다. 그들이 사겠다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팔 수가 없으니 어찌 그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빚치는 것을 겁내지 않은 무모한 차입 경영이 나라를 이지경으로까지 몰고 갔으니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 좋던 펀드멘틀이 IMF 뒷에 걸리자 속수무책으로 그들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탄만 하고 있기에는 갈 길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발전소 매각과 전력산업구조개편과는 무슨 상관인 말인가? 구조개편 역시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선택문제이다. 해외자본이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구조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들은 단지 발전소 매입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윤까지 챙기려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이윤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 투자에 따른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기존의 우리 '룰(Rule)'에 따라 사업하는 것으로는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룰'에 따라 최대 이윤을 겨냥하길 희망한다. 종래 방식을 고집한다면 발전소 매각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발전소 매각 대금이 형편없이 낮아져서 매각효과가 반감하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

값 받기 원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전력산업에서 그들의 '룰'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구조개편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노조가 아무리 반대해봐야 안 할 수 없고 한전경영이 아무리 내실 있게 행해져 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기업의 외채에 대한 실질적 채무 관계는 정부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 한전의 일을 정부가 앞서 나서는 것도 다 이 때문이나 그 책임은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정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과거 십여 년 동안 가파른 전력수요 성장에 따른 발전소 건설로 큰 빚을 지게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어찌 한전의 잘못이며 어찌 잘못된 전력 정책 탓이라 할 것인가? 당시의 상황으로는 산업계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외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한전경영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치 한전경영이 비효율적이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과잉고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전경영 하나만 놓고 본다면 초우량기업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최소고용으로 최대의 기업이윤을 추구한다면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이 오히려 외국 자본의 입맛을 자극했고 그들은 IMF를 기화로 '음흉한'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결코 한전 경영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 한전 고위 간부직원은 경영과탄의 원흉처럼 몰아붙이는 항간의 비난에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외국자본의 '음흉한' 손길에 가장 먼저 노출된 사람이 그들이요, 외국자본으로부터 우리 전력산업을 지켜줄 사람도 그들밖에 없지 않은가).

### 3. 캘리포니아 교훈

서방 여러 나라와 미국의 전력회사 상당수가 경쟁체제를 도입한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그들은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환경은 전력수요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그들 중 캘리포니아가 가장 야심차게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전력 수요가 많아 타주와 비교해서 전력요금이 비쌌던 것이 규제 완화에 의한 전력시장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이다. 보다 싼 전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ISO 등 구조개편 관련 기구들은 세계 여론을 선도해 왔고 많은 전력회사들이 그 귀추를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해 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로이 되어갔으며 전력요금은 상당수준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실제로 지난 해 초 몇 개월간은 싼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했고 관련자료를 공개해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전력회사들을 고무시켰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 부하가 급증하며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다. 공급부족으로 전력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주당국은 소비자 보호책으로 산디에고를 중심으로 한 남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자에 대한 전력요금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고 있었다. 공급부족으로 배전 사업자들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요금이 MWh 당 \$100(정상가의 3~4배)이 넘도록 치솟은 반면 수용가에 대한 공급가는 상한선에 묶여있어 엄청난 적자를 보아 거의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주당국은 사태수습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마련중인데 아마 완전한 시장경쟁체제보장은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 주당국의 시장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예측은 했으되 대비가 허술했는

가?

독립규제기관인 ISO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력부족사태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기본임무이다. 적정이윤만 보장된다면 시장원리에 의거 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은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발전사업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네바다 등 주변 주에서는 서부로의 주민유입이 많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하여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로 연결된 송전선에 부하를 증가시켜 오레곤, 텍사스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게 만들었다. 하절기에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설상가상으로 발전회사들이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발전회사들이 유지보수를 핑계로 노후발전소 가동을 미룬채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발전회사들의 담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특수 상황에서 법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 발전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나 배전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 도산위기에 봉착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ISO의 예상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시장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순기능이 나타나지만 균형이 깨어지면 매점매석 또는 투매 등의 역기능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그들은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적정이윤이 보장되면 발전사업에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업의 자본회전은 20~30년 장기간을 요한다. 환경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나 주민의 반발 역시 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소 이윤이 떨어지더라도 확실한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본 회전 기간이 짧은 가스터빈 발전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일시적으로 전력부족을 메울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력요금 상승이 뻔하지 않은가.

혹자는 캘리포니아 전력사태를 '인재'라고 규정 짓는다. 지나친 환경규제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규제 완화조치를 취한다 해도 장기투자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냐 하면 환경규제완화가 장기간 지속될지는 의문이며 어느 누구도 먼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나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자유시장경쟁에서 일보 물러섬을 뜻한다.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는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일어난 사례이지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력수요가 매년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발전 및 송전에 대한 장기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캘리포니아 사태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우리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는 전력수급대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해외자본의 국내 발전사업 참여

발전소 해외 매각으로 해외자본의 국내 전력산업 진출은 기정 사실로 되어 있다. 그들은 발전소 매각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도 집요하게(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그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간접적인 목적이 이면에 감추고 국내전력산업에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발전사업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금리 이상의 이

윤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발전소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한전은 과도한 해외부채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해외 투자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그들이 금리 이상의 이윤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발전사업에 투자하려고 할 것인가? 그들은 상당한 이윤을 예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 부친 LG 복합화력 매각에서 외국자본이 요구한 15%의 투자보수율(Return On Investment: ROI, 투자수익율이라고도 함)이다. 투자액의 15%를 연간 적정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투자상황이 크게 바뀌기 전(7년 이내)에 투자 회수를 하기 위해서 15% 투자보수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이 수치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있다. 한편, 그들은 단기적으로도 이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있다.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장경쟁체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체제에서 그들의 '룰'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이익을 겨냥코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력사정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가파른 수요증가로 당분간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캘리포니아 사태와 마찬가지로 발전사업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들은 우리 나라 발전사업이 과잉 고용상태에 있음을 주목하고 있고, 과감한 인력감축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매입조건으로 종업원의 대량해고를 보장받으려고 할 것이며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소의 인원으로 발전소를 가동시킨다면 그들은 큰 이윤을 남길 것이나 우리 경제에는 감축된 인원만큼 고용불안 등의 여파로 악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기업은 살이 찌고 국가 경제는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살진 기업이 외국자본인 경우는 국부유출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상당한 누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오는 것이다. 부당이득도 마다 할 리 없다. 구조조정은 부당이득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장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구조개편을 거부할 입장이 못된다.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좋은 제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잘못된 곳, 약한 곳을 두드려보아야 한다. 아픈 곳을 감추어 두고 있으면 자는 것과 다름없다. 감추지 말고 공개함으로써 최선의 방책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서야 할 것이며,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투자이면에 또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더욱 경계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력산업은 기간 산업으로 전력요금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자본은 우리 전력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전력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단 발판이 마련되면 그들의 간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IMF를 통한 금융간섭이 좋은 예가 된다. IMF 초반기에 우리에게 강요한 금리정책을 필자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20%가 넘는 고금리를 강요하다가 갑자기 10% 미만의 저금리로 바뀌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IMF가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나 실상은 강요한 것이다. 미국이나 구라파의 저명학자들조차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우리는 불평 한마디 못하고 따랐다.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라지만 이 바람에 넘어간 우량기업도 수없이 많다. 그들은 우리에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엄청났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간섭은 IMF 빛을 청산한 지금

까지도 남아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덕고리채는 법적으로 금하는 것이 당연하나 IBS(국제결제은행) 등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제시한 BIS(자기자본비율) 수치를 맞추어내지 못한다면 또 다시 고금리 정책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관련입법은 60%의 고리사채를 합법화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이율을 30%선까지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정한 수치로 생각된다.

전력산업도 이제 해외자본의 간섭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 벌써부터 그들은 산업용 전력의 요금혜택을 불공정 경쟁의 하나로 지적하며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부터 우리가 사용해 온 산업육성책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물'을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업환경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일견, 그들이 주장하는 '물'은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보호정책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들의 '물'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제시한 보편'물'이 아니라, 특수상황에서 빚어지는 그들의 자의적인 '물'의 해석이나 때에 따라서는 자본의 힘을 앞세운 강압적인 요구가 될 것이다. 전력부족사태가 빚어질 경우 요금상한선 제한이나, 파잉발전설비시 나타날 수 있는 전력투매에 따른 손실보상,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정책 등 특수한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산업정책이 그들의 간섭에 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의 힘을 앞세운 경영권 잠식, 산업환경조성 및 산업활동에 대한 간섭 등은 그들이 노리는 제2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제1의 목적은 투자한 대가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자금상황이 호전되면 쉽게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제2의 목적은 한 번 그들의 의도가 관철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 여파는 전산업으로 퍼져나가 부지불식간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더욱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